

## 통산부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

통상산업부가 7월 22일 발표한 「무역수지개선 종합대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산업·통상·에너지 부문의 대책을 포괄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의 대책을 포괄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수지 개선 차원을 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에 가까운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산부가 이날 선정한 68개 과제는 상업차관 확대, 근로자파견법 제정 등 물가 불안이나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내용이 다소 포함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대체로 수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기업의 해외자금활용 원활화 ▲사업차관 연간 도입한도 완화=국산시설채 구입용 상업차관 연간한도를 현행 20억달러에서 40억달러로 확대 ▲대기업의 도입비율 제한(현행 소요금액의 70%) 폐지 ▲외화증권 발행규제 완화=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발행자 요건 폐지

◇ 아파트형 공장 건립 활성화 ▲입주업체에 대한 입주소요자금 50% 지원 ▲택지개발지구내 공장용지 조성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에 대해 특별부가세 면제, 소득세법상 건설업자로 분류

◇ 물류비용 절감 ▲부두운영회사제도의 개편=화주 및 선주에 부두운영권 개방 ▲임대기간 장기화 ▲부두관리협회와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유사기능 일원화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체제 개선 ▲항만운송사업자 및 노무자의 단체가입 의무화 폐지 ▲각종 활증요금, 품목별 요금차이 등 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 ▲부두직송체계 확립=선상통관, 부두내 통관 및 보세운송절차 간소화

◇ 기술개발 역량 제고 ▲ 산업기술인력의 체계적

양성=사내기술대학의 정식 학제화, 단설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등 ▲기술개발수행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 배제 및 최저한세율(10%)인하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민·군 겸용 기술개발의 추진 ▲산업디자인 개발을 위한 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허용 및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금융기관 대출을 출자로 전환 ▲유상증자 원활화=증자소득공제제도 도입,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 ▲인수·합병제도 개선=청산소득과세, 의제배당소득과세, 중복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등 감면, 비경쟁제한적 인수·합병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 유가증권 등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

◇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외국인투자사업의 임대료 감면 및 공장부지 분양가 인하 지원(중앙·지방채균등분담) ▲외국인 근무자에 대한 비자제도, 의료관련 애로해소, 개인별 토지소유 허용(1세대 1백평 이내)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강화 ▲대기업이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지급한 협력기부금의 손금산입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 확대 등

◇ 에너지가격 예시제 추진 ▲경유·LNG·LPG 및 전기요금의 연도별 목표가격을 예시, 매년 특소세 인상 또는 수입부과금으로 가격 조정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무선통신기기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가 인하되고 음반·비디오 등의 유통질서가 개편되며 수입선다변화 품목이 일부 해제되는 등 달라지는 것이 많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무선통신기기 수수료 인하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PCS), 데이터, 주파수공용통신(TRS)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가 7월 1일부터 평균 56% 인하된다.

◇ 일부품목 수입선다변화 해제

7월 1일부터 자동차 카세트용 테크메커니즘과 감열기록지 등을 포함한 14개 품목이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된다.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공공기관이 초고속국가망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망 서비스관리센터가 3·4분기에 설치돼 시범 운용되고 전국 80개 구간을 연결하는 광케이블망과 광전송장비 구축이 4·4분기에 완료된다. 이와함께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에 비동기전송모드(ATM)방식 초고속교환기가 4·4분기에 설치된다.

◇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9월중 창업지원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되고 10월에 CALS/EC시범사업 시스템이 구축돼 창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정보화사업이 추진된다.

◇ 정보활용능력 제고사업

7월에 놓여준 컴퓨터 교실이 개설되고 4·4분기중에 부산에 「정보화상담실」이 개설된다.

◇ 의료용구관리제도 개선

오는 9월 1일부터 909개 품목의 의료용구를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 관리하는 의료용구 등급분류제가 도입된다.

◇ 승강기제조법을 시행령 공포

승강기 보수업 등록기준 강화 및 애프터서비스 기간 3년 의무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말 개정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중순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

◇ 음반 등 유통질서 개편

청소년 유해매체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반·비디오·영화·TV프로그램 등의 유통 및 방송질서가 크게 달라진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영화·비디오·음반·공연·도서·방송·광고·게임 등 모든 매체물을 대상으로 심의가 실시되며, 유해물 판정이 날 경우 「18세 미만 불가」표시를 해야한다.

◇ 250개 용품에 관세감면

7월 1일부터 에어컨시험장치 등 43개 품목이 향후 1년간 관세가 감면되고 국내 생산이 가능한 에어백시험기, 습도시험기 등 67개 품목은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여과기, 온도측정기 등 207개 품목은 재지정됐다. 재정경제원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등 3,117개 기관이 수입하는 산업기술 연구 및 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품목을 이같이 변경, 고시.

◇ 중기물품의 의무구매기관 확대

올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기관이 43개에서 60개로 확대된다.

◇ 민간예보사업 시행

기상업무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7월 1일부터 기상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예보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산업안전보건 신기술 개발 경진대회 현상공모**

— 금상 1천만원 등 총 16명에게 5,900만원 수료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이사장 : 안영수)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민의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병예방에 대한 관심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전국 산업안전보건 신기술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신기술 개발 경진대회의 제안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자동화, 방호장치 및 보호구 개발, 작업환경개선설비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직업병예방 및 치료기법 등 근로자의 안전

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신기술의 대상이 된다.

이 대회에의 제안대상 제출기간은 '97. 8.31일까지이며 접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본부(Tel : 032-5100-581)에서 하고 최종발표는 '97. 12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우수제안으로 입상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부상과 노동부장관의 표창을 수여받음은 물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설 자금융자혜택을 부여하고 신문 및 매스컴 등에 널리 홍보하게 된다.

### (1) 대상

#### ○ 신기술개발품

-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자동화
-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각종검사 대상 기계·기구설비와 그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검사에 필요한 장비
-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 제안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술 및 관리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신종 직업병 발견, 검진방법 또는 중금속 중독진단, 치료법 개발

### (2)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지원

- 기술정보의 상호교류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행사시 이를 전시 홍보
- 금상수상자에 대하여 정부포상 추천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융자규정에 적용되는 사항에 한함)
- 신문 등 매스컴에 홍보 등

### ■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

한국 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지원국

TEL : 032) 5100-579~581

FAX : 032)515-5897

#### 주소

인천시 부평구 구산동 34-4, 6번지 403-120

## 중기유통정보화 519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유통정보화, 공동물류정보망 등 유통합리화 사업에 총 51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1차로 29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유통정보화·공동물류정보망·공동집배송단지·집배송센터·물류공동화·물류표준화 등 6개 분야에 총 51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융자지원되는 유통합리화 자금은 연리 6.5%에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이다. 유통합리화 사업별 지원내용을 보면 판매시점관리·정보관리 등 유통정보화사업자에 대해선 1억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100%까지, 또 물류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종별 관련기업 또는 기업단지내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30억원이내에서 사업비의 50%까지 각각 지원된다.

중기청의 유통합리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중기청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02)509-7114

## 정보통신분야 국제 공동연구 2001년까지 700억 지원

정보통신부는 국내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정보통신분야 국제공동연구에 올해 100억원을 포함해 2001년까지 700억원을 정보화 촉진기금에서 지

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분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는 물론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00억원(97년분) 규모의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APII협력센터(www.apii.or.kr)를 통해 지원과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따로 없이 지원과제를 연중상시 접수해 분기마다 과제를 선정하며 연구개발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연구」와 「본격연구지원」의 두단계로 나누어 시행한다.

타당성연구는 연구개발 과제의 약 2배수를 선정해 6개월 이내에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본격연구개발은 과제당 10억원 이내, 총연구비의 50% 안에서 지원한다.

정통부는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계획을 APII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7월말까지 관리세칙, 평가기준 등 세부계획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방폭전기기기 검정기관 지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소장 : 김공래)는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및 한·일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폭기술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통상산업부로부터 방폭전기기기 검정기관으로 인정받아('97. 5.27) 관련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근거 :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23호)

방폭전기(Explosion-proof electrical apparatus)는 폭발성·가연성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로써, 이러한 위험지역은 주로 석유·화학플랜트 등 위험한 제조, 취급 사업장으로 사고발생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는 특별한 방호조치와 함께 철저한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산업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수명예측, 비파괴진단 등의 업무와 연계하여 ①방폭전기기의 품질인증 ②폭발위험지역내 방폭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③폭발방지기술에 관한 연구개발(R&D) 및 제조업체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는 국제전기기기 위원회(IEC)로부터 방폭분야에 대한 국제인증기관 지정과 UL, CSA 등 외국방폭인증기관과의 쌍무협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는 본 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내 방폭제품의 품질향상과 수출촉진 및 화재·폭발사고로 인한 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 품질보증마크 부착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품류, 전자제품 등은 한국의 KS마크와 유사한 러시아의 보증마크인 CPT마크 부착이 의무화된다.

러시아 정부는 '소비자권리 보호법(96년 1월 개정안)'과 '상품과 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법(1993)' 및 '상품의 강제인증을 위한 품질보증 마크 신청 규정(96년 7월 25일)'에 근거해 안전증명서 제출의무품목에 대한 CPT마크 부착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던 가운데, 금년 5월 17일 정부령 601호에 따라 위조방지와 의무적인 특별품질보증마크

부착 상품 리스트가 발표됐는데,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품질보증 마크가 부착되지 아니한 해당상품은 러시아내 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령에 따라 품질보증마크 부착이 의무적인 상품들은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HS코드 09류) ▲음료, 알콜 및 식초(22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39류) ▲고무와 그 제품(40류) ▲가죽제품과 관련 고가제품(42류) ▲철강제품(73류)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84류)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 TV 영상 및 음성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85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 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 및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90류) ▲악기 및 그부분품과 부속품(92류) ▲가구류(94류)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95류) 이다.

CPT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품질검사와 마크사용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마크사용 유효기간은 라이선스 기간과 동일하고, 마크의 판매가격은 1개당 약 300루블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질보증마크 부착이 의무적인 상품 리스트는 GOSSTANDART에 의해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러시아내 품질보증 절차는 품목별로 구비서류 등이 상이하나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신청업체는 품질인증기관에 상품의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품질인증기관은 신청서를 검토, 신청서의 조건과 절차에 대해 1개월내에 회신해 주는데 특히 인증계획, 필요한 서류목록, 검사연구소 리스트 등을 제시해준다.

**귀사의 카탈로그를 인터넷에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KOTRA에서는 최근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73개국 107개 무역관을 대상으로 1,681개 품목을 수출확대중점품목(Targeting Item : TI)으로 선정해

목표시장을 집중공략함으로써 가시적인 수출증대에 기여코자 올해도 KOTRA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시대에 부응, 중소기업의 수출상품 인터넷 거래알선 시스템(KOBO)을 개발했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KOTRA 홈페이지인 'Digital KOTRA'에 Targeting Item 국내 중소기업체 대상으로 컬러 카탈로그 및 수출상품 정보를 수록해 해외 바이어들과 인터넷을 통해 수출거래 상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많은 업체의 호응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Targeting Item 중소기업체
- 수록품목수 : 1개사당 1개 Targeting Item
- 제출자료
  - 제품컬러사진 : Product Information을 타이핑한후 하단에 귀사의 대표 상품 컬러 사진 (기존 카탈로그 사진을 오려붙여도 됨.)을 A4 용지 반장 또는 한장에 부착
  - 제품 영문설명서(자체 감사후 제출 요망) : HS Code(6자리)와 Product Description을 A4 용지 반장 또는 한장에 개조식으로 영문 작성
  - KOBO 신규업체 등록양식
- 제출기한 : 97년 9월 30일까지 선착순(사전 마감 가능)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처 : (135-7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KOTRA 마케팅지원처
- ※ 문의처 : KOTRA 마케팅지원처 사업개발부 조기창, 김신아 (전화 : 551-4375~6, 팩스 : 551-4373)